

[주간동향] 2006. 4. 25 ~ 5. 3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아직도 미흡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촉진방안 논의
- ❖ 5월 1일~3일,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 서울 총회 열려
- ❖ 상장기업, 여성 비율 평균 20% 넘어

❖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아직도 미흡

여성가족부가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보고한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2005년 정부 내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율이 32.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431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만 9,969명 중 6,476명이 여성위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2%p 증가했으나, 목표율인 36%에는 3.6%p 미달된 수치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 362개 위원회 위촉 직 위원 7,742명 중 여성위원은 2,157명 27.9%에 비해 0.7%p 증가한 반면, 16개 광역자치단체 1,069개 위원회 위촉 직 위원 12,226명 중 여성위원은 4,313명(35.3%)으로 전년도에 비해 0.5%p 증가해 목표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50%, 국가보훈처 44.4%, 식약청 41.8% 등 12개 기관이 목표율을 달성한 반면, 소방방재청이 7.2%로 가장 낮았고 문화재청 10.9%, 건설교통부 14.3% 등 31개 기관이 목표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29.5%의 참여율로 가장 저조했으며, 강원도가 40.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율 저조기관에 대해 ‘자체특별 이행방안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여성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위원 위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등 여성인재 양성·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확정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혈통주의로 인해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200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을 배치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이와 함께 혼혈인과 이주자를 위해서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책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그간 우리사회가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이며, 그 가운데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농림어업 남성종사자의 경우 35.9%가 국제결혼이며,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4월 현재 국제결혼이민자 자녀 즉 혼혈아동은 30,727명으로 집계되었다.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2006~2010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전문가회의,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족정책기본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이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가족정책의 정책비전으로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와 정책목표인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 간, 세대 간 조화실현'과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족정책의 인프라 확충 등 총 6개 영역의 180여개의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아버지 출산휴가제·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하였으며, 가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내실화를 통해 범정부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주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촉진방안 논의

지난 4월 28일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당정공동특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소득계층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첩경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 '당정공동특위'를 구성하였다. 이번 종합보고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청년층의 고학력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동안의 논의 중 주요한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에서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여성의 고용기회 확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 중 '출산 친화적 여성 고용 촉진'이 20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출산·육아와 근로의 양립가능성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 고용 지원 및 실질적 고용평등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하고, 여성특화 고용지원 전산망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조기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평등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5월 1일~3일, 세계여성경제인협회(FCEM) 서울 총회 열려

세계 61개국 여성경제인들의 비즈니스 축제인 ‘2006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가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개최되었다. 중소 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약 700여명의 세계여성경제인이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여성경제인의 동반성장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통합’을 주제로 총회와 CEO 초청강연, 우수기업 초청박람회, 한국 투자 설명회,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IR 컨퍼런스 및 파트너쉽 프로그램·시티투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 총회를 통해 전 세계 여성경제인들이 사업정보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구성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등 여성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프랑수아즈 포닝 FCEM 회장과 영국, 벨기에, 러시아, 태국, 대만 등 각국의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정세균 산자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등 정부, 학계,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세계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지난 1945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65개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아시아에서 총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상장기업, 여성 비율 평균 20% 넘어

4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실린 유가증권시장 소속 상장사 548개사의 200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기업의 평균 여직원 비율이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말 19.8%보다 1.6%p 늘어난 수치이다. 여성비율이 늘어난 것은 작년 한 해 총원된 직원들 중 여성이 64.2%로 남성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장사는 7.7%인 42개였는데, 이들 기업은 주로 의류업체나 백화점 등 유통관련 업종기업이었다. 시가총액 30위 이내 대기업 중에서는 엘지카드(63.3%), 하이닉스(50.9%), 롯데쇼핑 등의 여직원 비율이 50%를 넘었다. 여성이 78.5%를 차지하는 웅진씽크빅은 남녀 고용평등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기업이며, 엘지카드는 지난 3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여직원은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기업과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에서조차 여성들은 주로 생산직과 비정규직에 몰려 있었으며,

철강·건설·자동차 등의 업종에서의 여성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직원이 많은 기업에서도, 한섬의 경우 여직원 열 명 중 아홉 명은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기타 직군'으로 분리되어 있다. 결국 늘어난 여직원 중 상당수는 콜센터나 현금출납원 등 비정규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